

‘민생쿠폰’ 키오스크 주문 안돼…“손님들 떠나면 어쩌죠”

행안부, 지자체에 사업지침 안내
무인주문기 제한, 단말기 이용을
자영업자, 고객혼선 등 불만 토로

세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에서 사용이 제한돼 시행 첫날부터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도입이 확산되면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안내 없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대신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함께 무인주점기 대신 가맹점 자체 단말기 사용을 유도하도록 안내했다.

이 같은 조치는 외식업체에서 키오스크 등을 통해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이 소상공인의 실매출이 아닌 무인주문기 대행사 매출로 집계돼 소비쿠폰 승인 자체가 막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 과정에서 무인기기가 거래를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

종)’로 인식, 가맹점의 실매출로 인정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배달 어플이 아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식업체를 비롯한 각종 매장에서 키
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가 일반화된 상황이라 시
행 첫날 소비자들의 혼선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호남지역 태블릿PC(테이블 오더) 도입률이 0%에서 지난해 16.7%로 급증했다. 키오스크도 2023년 44.1%에서 지난해 75.4%로 사용률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무인주문기 사용 제한으로 인한 고객 혼선과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구 총장로1-3가 상인회 이사는 “평소 무인 키오스크만 활용해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접 주문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쿠폰을 발행해서 인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지원금 이용하지는 않든은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부분이 코로나19 지원
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당황스
럽다”며 “정부나 지자체 모든 상인들에게 한 번

의 안내는 없었고,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대책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년째 총장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박병주 대표는 “요즘 대부분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를 사용하지만, 시스템상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장에

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인들은 이번 소비쿠폰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

다”고 말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지역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이 무인주문기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겠다”며 “시행 첫날 혼선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이수민 기자

남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남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2억원으로, 해당 재원은 전액 구비에서 마련했다. 전체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연매출 30만 원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

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남구는 소상공인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권과 손잡고 62억원 상당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자 차액과 보증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골목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지역 20곳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확대했으며, 착한 가격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봉투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미납 패소금’ 강제집행 돌입

5차례 구상권 청구에도 미지급

광주 서구의회가 의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김옥수 의원의 미납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 선출이 부당하다며 서구의회에 '의장 선임 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월과 2심, 상고심을까지 최종 패소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김 의원이 서구의회에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결정했다.

김 의원이 의회에 지급해야 할 민사소송 비용이 2,100만원에 달하지만, 패소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구의회와 세입기관인 서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김옥수 의원에게 2,100만원의 미수납액을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구상권 청구 독촉 고지서를 김 의원에게 발송했다.

김 의원은 미납 이유에 대해 “처음 구상권 청구 고지서를 받고 소송 패소금을 납부하고 싶었

지만, 돈이 없어 못 냈다”며 “독촉을 받은 후에는 서구와 의회에 앞으로 나올 월급을 내겠다고 말한 상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법률 자문과 지방재정법,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세입 기관이 아니다 보니 구상권 청구 발행 권한이 없다.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에 따른 절차다”며 “법무사 선임과정 등이 2개월 정도 걸린다. 이후 각 의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까지 설치 의무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062) 382-3884

NICE K24
접근성 키오스크 ▶

- 1500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외함 구조
- 1220
- 1000
- 500

고대비모드

음성주문

돋보기모드

방향키패드

점자패드

**◀ LG전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 노인
접근성 보장 국내 1호

LG전자 공식 인증점 | 주태등